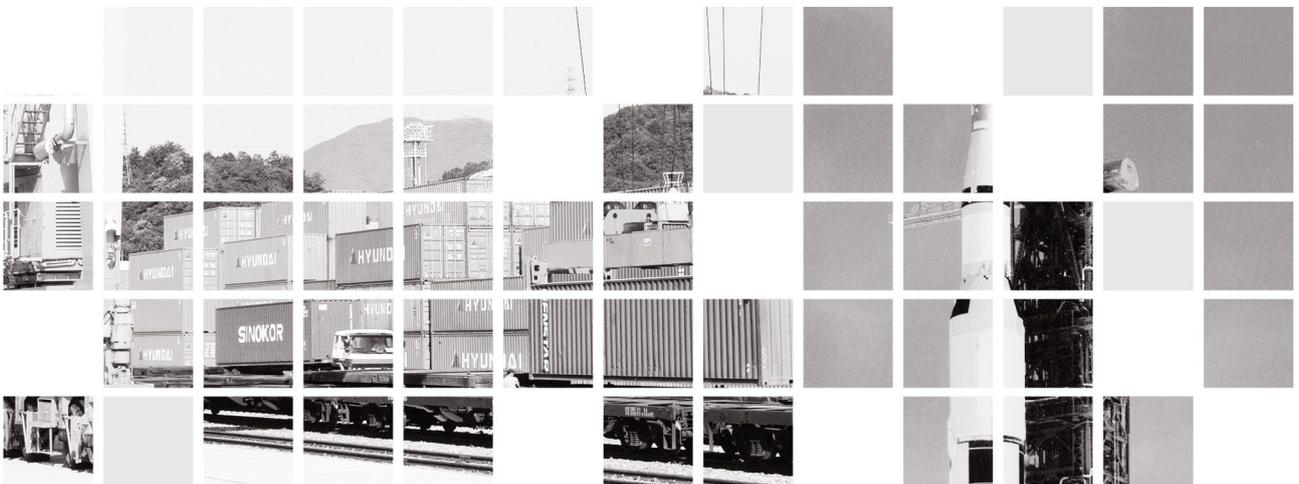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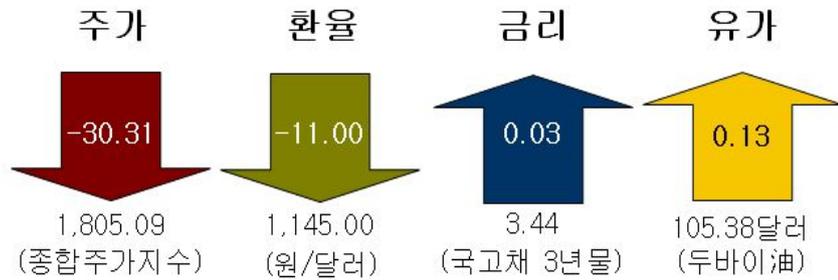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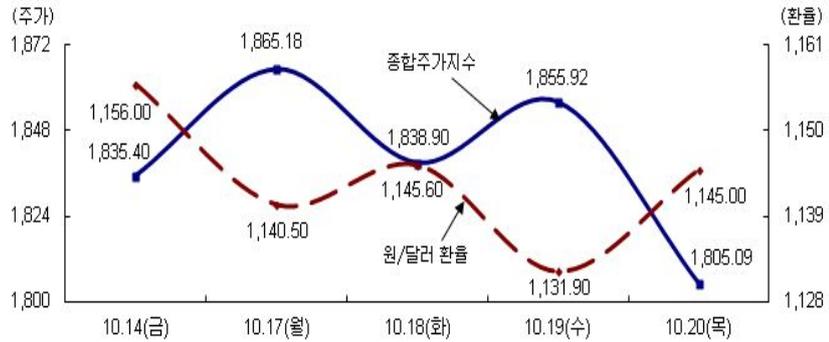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국내 고용시장의 체감도 개선 방안
- 독일 고용기적에서 배워야]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14~10.2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고용시장의 체감도 개선 방안 - 독일 고용기적에서 배워야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조 호 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고용시장의 체감도 개선 방안 - 독일 고용기적에서 배워야

■ 독일 고용시장의 기적

독일 실업률이 2011년 8월 6.0%로 하락하면서 2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일 고용시장은 2005년 이후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신규 일자리 창출도 2011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75만개 플러스로 전환되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특히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가 1992년 33%에서 2009년 42%로 높아져 질적으로도 함께 진행되었다.

Ifo(뮌헨대학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독일 고용선행지수도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 호황 때보다도 여전히 높아 고용 호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독일 고용시장 기적의 비결

독일 고용시장 기적의 비결은 정책적, 구조적, 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정책적 요인) 첫째, 과잉 고용복지는 축소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한 제도적 개혁이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 하르츠 I~IV개혁으로 장기 실업급여와 복지 급여의 급여기간이 기존 12~36개월에서 12개월로 액수도 최저 임금수준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비숙련 장기실업자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는 저임금·시간제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둘째, 경제 위기시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에 독일의 단축근로시간 참여율은 3.1%로 프랑스 0.9%, 미국 0.2%에 비해 높았다. 즉 기업들이 기존의 단축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정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량 해고를 자제하였고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근로시간 50% 단축시 삭감된 임금의 60%를 보전해 주었다.

(구조적 요인) 셋째, 구인과 구직 간 미스매칭을 낮추는 이중 직업교육체계(Dual System)가 구축되어 있다.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 35.4%로 영국 59.2%, 미국 53.2%에 비해 크게 낮다. 반면 2008년 기준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은 53.2%로 영국 30.5%, 프랑스 44.2%에 비해 10%p 이상 높다. 이로 인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8월 기준 8.9%로 프랑스 23.5%, 유로존 평균 20.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대졸이상 비중(최종학력 기준)도 14.4%로 프랑스 36.6%, 유로존 평균 23.8%에 비해 낮아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낮다고 평가된다.

넷째, 세계화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IMD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2위이며 대기업보다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률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히든 챔피언들(1,500개 중 1,350개가 중소기업으로 구분)과 히든 챔피언을 꿈꾸는 경쟁력 높은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

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독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독일 중소기업들은 2011년 경영상황을 2007년 호황 때보다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적 요인) 다섯째, 노동 비용의 상승이 억제되면서 높은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었다.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주요국 대비 낮아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특히 독일 통일이후 임금이 낮은 구동독지역의 수출 거점 역할이 커지면서 구서독 지역의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동반되었다. 2009년 구동독지역의 월평균 임금은 서독의 74% 수준으로 여전히 낮다. 또한, 유로화 도입도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을 유로존 여타 국가 대비 낮게 유지시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고 이는 재차 투자와 고용을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섯째, 근로조건의 탄력성이 높은 서비스 고용이 활발해졌고, 이는 시간제 및 여성 취업을 보다 활성화시켰다. OECD 서비스업 고용지수(2005=100)를 보면, 독일은 2011년 2/4분기 111.8로 프랑스 107.2, 영국 105 등 보다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이 활발하다. 독일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도 1990년대 평균 61.2%에서 2000년대 67.8%로 약 6.6%p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2000년 19.1%에서 2010년 25.5%로 여성 고용률도 동기간 57.8%에서 66.1%로 개선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 국내 고용시장에의 시사점

국내 고용시장은 3% 초반의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되고 고학력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움이 커졌고,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 심화, 고학력화 등으로 지표와 체감 고용시장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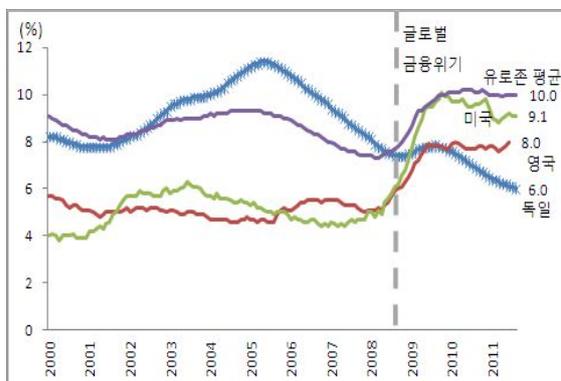
이에 최근 독일의 고용 호조를 통해 국내 고용시장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독일 하르츠 개혁과 같이 정부기관의 일자리 중개기능 확대, 고용 유형의 다변화를 통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 독일의 고용지원센터와 같이 직원 1인당 실업자 수를 낮춰 일자리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Minijob, Midijob과 같이 고용 유형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둘째, 시간/유연제 근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와 장기 실업자의 고용시장 진입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정규직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실업계 고교 진학을 제고, 기업 연계 직업교육 강화로 고학력 현상을 완화하고 고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춰야 한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등 실업계 고등학교를 활성화하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 맞춤형, 기술 중심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은 대형화·고도화로 중소기업은 세계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1. 독일 고용시장의 기적

○ 독일은 실업률이 20년 내 최저 수준¹⁾으로 하락하는 등 고용 호조가 지속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독일 실업률은 계속 하락
 - 독일 실업률이 2005년 11%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2011년 8월 6.0%(1992년 1월 6%를 기록)로 떨어지면서 2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
 -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경기회복 지연으로 고실업률이 지속되고 있고, 유로존 평균 실업률도 독일에 비해 약 4%p 높은 수준임
- 독일의 고용시장은 2005년 이후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고용이 호조세를 이어감
 - 독일 고용률은 2000년 65.6%에서 2010년말 71.7%로 6.1%p 높아졌는데,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동기간 58.1%에서 66.1%로 8.0%p 상승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전년대비)이 2005년 3.1%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청년실업률도 동기간 15.5%에서 9.9%로 크게 낮아짐
- 2011년 1/4분기 들어 금융위기 이전의 신규 일자리 창출력도 회복
 - 2005년부터 크게 늘었던 신규 일자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후퇴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 3/4분기 이후 개선되기 시작해 2011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74.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자료:OECD 통계.
주:월 기준임.

<독일 고용시장 지표>

(%, 전년대비)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8
고용률	65.6	66.0	70.7	70.9	71.1	72.5
여성	58.1	60.6	65.4	66.2	66.1	67.7
비경제 활동인구 증가율	-0.2	3.1	0.5	0.0	-0.8	-0.5
실업률	7.5	11.2	7.5	7.8	7.1	6.0
청년 실업률	7.5	15.5	10.6	11.2	9.9	8.9

자료:Eurostat.
주:고용률과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은 2011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1) 독일 실업률은 1991년 5%대였으나 이후 계속 높아져 2005년 4~6월 11.4%로 최고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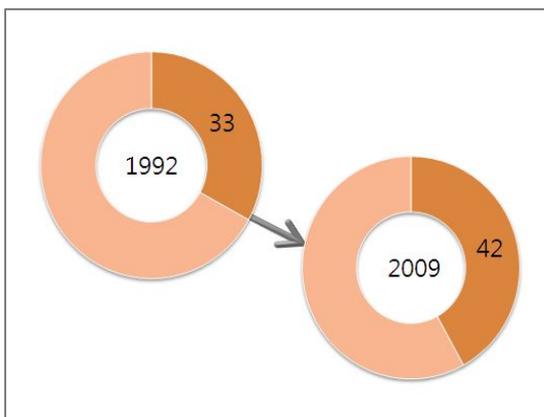
○ 고용시장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함께 진행

- 독일 통계청(2011)에 따르면, 전문직(highly qualified occupation)²⁾에 종사하는 취업자(15~64세)가 1992년 33%에서 2009년 42%로 크게 증가함
 -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는 기술과학 분야, 의사, 엔지니어, 교사 등의 종사자가 지난 17년 동안 9%p 늘어남
 - 특히 교육과 의료 지원 분야에 여성 근로자가 많아 전문직에의 여성근로자 비율이 45%로 남성의 40%보다 5%p 더 높게 나타남

○ 유로존 재정위기에 독일의 고용 호조는 지속되어 독일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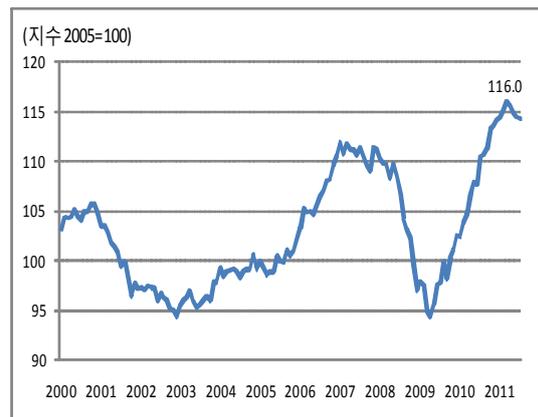
- 독일 고용시장 호조는 수출과 더불어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Ifo에서 발표하는 독일 고용선행지수가 2009년 상반기 이후 100을 넘어서 2011년 3월 116으로 금융위기 이전 경기호황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9월에도 113.1로 고용호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독일의 2011년 GDP 성장률은 2011년 2.5%로 유로존 평균 1.6% 대비 0.9%p 높고 실업률도 6.6%로 2005년 이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

<독일의 전문직 종사자 비중>



자료:독일 통계청.

<독일 고용선행지수^{주)} 추이>



자료:Ifo(뮌헨대학 경제연구소).

주:7000개 기업에게 향후 3개월 간의 고용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지수화.

2) 기업의 임원급 이상, 과학기술,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의사, 선생님 등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을 말함. 독일 통계청, 「Quality of Employment,」 p. 52, 2011년 4월.

2. 독일 고용시장 기적의 비결

1) 정책적 요인

○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 과잉 고용복지는 축소하고 유연성을 제고한 제도적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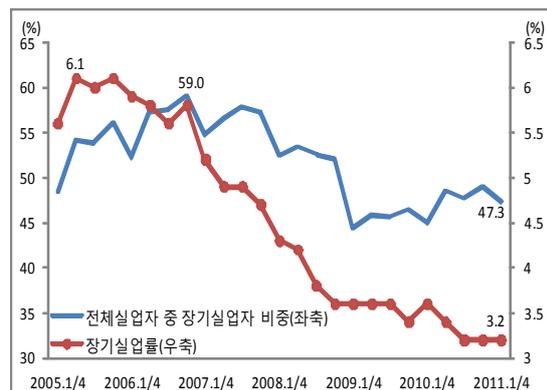
-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한 「하르츠(Hartz) I~IV」와 「아젠다 2010」 개혁
 - 2002년 독일 고용시장 개혁위원회는 고용시장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위해 2003~05년까지 순차적으로 하르츠 개혁을 시행하였고 궁극적으로 아젠다 2010을 통해 독일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시도
 - 하르츠 I,II(2003년)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및 보조금 지급과 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보조금을 지급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2004년에 시행된 하르츠 III을 통해 노동청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단행
 - 하르츠 IV는 2005년에 시행되어 장기 실업급여와 복지 급여를 통합하여 급여기간과 액수를 축소³⁾시킴
- 이로 인해 비숙련 장기실업자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임금·시간제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근로의욕이 높아짐
 - 독일 경제활동인구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5년 하반기 6%에 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11년 1/4분기 3.2%로 떨어짐
 - 이에 따라, 실업률 중 장기실업률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하반기에 59%에 달하였으나 최근에는 40% 후반대로 낮아져 장기실업자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짐

<하르츠 개혁 내용>

개혁 시기	내 용
I (2003년)	-고용중개청 설립 -노동청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II (2003년)	-MiniJob, MidiJob 등 새로운 유형의 고용 창출, 기업보조금 지급 -고용주 보조금인 Ich-AG 지급
III (2004년)	-노동청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일자리 지원역할 강화
IV (2005년)	-장기실업급여 기간을 12개월로 축소 -복지급여도 금액을 크게 축소

주:Minijob은 월 400유로(약65만원) 이내, Midijob은 월 400-800유로(약65~130만원) 이내의 저임금 일자리임.

<독일 장기실업률 추이>



자료: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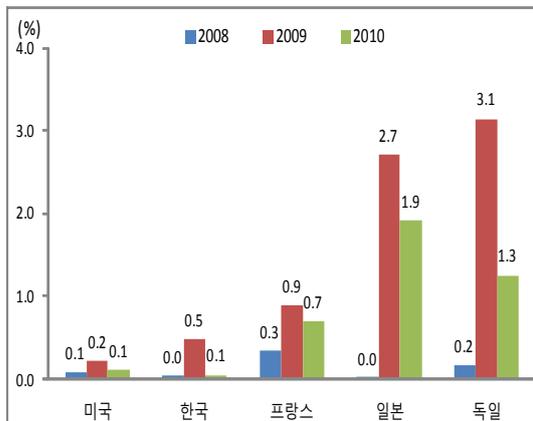
주:장기실업은 12개월 이상의 실업상태.

3) 2005년 이전에는 12~36개월 간 실업 전 순임금의 60~67%를 받고 이후에는 53%~57%를 수령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총실업급여 기간을 총 12개월로 한정하였고, 복지급여도 최저임금수준보다 크게 낮추어 평생수령 가능토록 조정. 한편,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 중 노동청이 제시하는 합법적 일자리의 거부 여건을 폐지.

○ (위기시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 역할 분담) 금융위기 당시 독일 기업들은 근로자의 평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자제하였고, 정부도 보조금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

- 근로시간 단축제 등의 참여 확대에 경기요인에 따른 대량 해고를 자제
 - 기업들은 단축근로제도(Short-work plan) *, 잔업축소, 근로시간계정(Work-Time Accounts)** 이용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해고를 억제
 - 실제로 2009년 독일의 단축근로시간 참여율은 3.1%로 주요국 대비 크게 높았고 이는 2008~9년 독일의 평균 근무시간을 약 4% 줄어든 것 함
 - 이에 따라, 2009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하였으나 실업률은 전년대비 0.2% 상승에 그친 반면, 미국의 실업률은 동기간 5.8%에서 9.3%로 3.5%p 급등
 - * 근로시간단축제도는 기업이 경기침체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고 대신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일정조건 하에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통해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50% 단축시 줄어든 임금의 60%를 연방노동청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 ** 경기호황기에는 근로시간을 기준보다 늘려 계정 상에 초과분을 비축하고 불황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초과분을 소진 할 수 있는 제도
- 특히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 당시 숙련근로자 채용의 어려움이 기업이 인력감축에 더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계기가 됨
 -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독일 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후퇴가 외부 요인에 기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주요국의 단축근로시간제 참여율>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주: 전체 근로자 대비 참여 비중임.

<독일의 평균근무시간 단축의 기여요인>

요인	기여율
근로시간 단축제도	25%
고용주 지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40%
잔업 축소	20%
근로시간계정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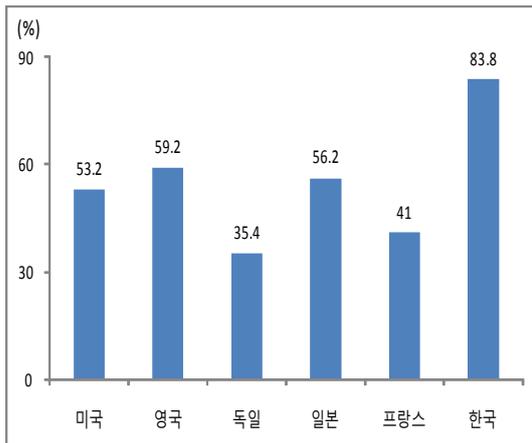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이며,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이 고려되지는 않았음.

2) 구조적 요인

○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낮추는 직업교육 시스템) 학력 선호보다는 현장과 결합된 체계적인 직업교육시스템(Trained by Germany) 구축으로 구인과 구직 간 미스매칭을 낮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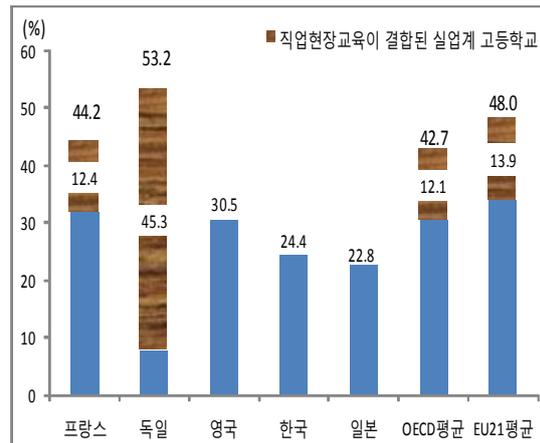
- 주요국 대비 대학진학률은 매우 낮은 반면,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음
 - 독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기준 35.4%로 미국 53.2%, 일본 56.2%에 비해 낮음
 - 그러나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후기 중등교육과정(ISCED3~4)⁴⁾의 53.2%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는데, 특히 학교와 직업현장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이 45.3%에 달함

<주요국의 대학진학률>



자료: OECD 통계.
주: 2008년 기준.

<주요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주: 2008년, 고등학교 교육과정(ISCED3) 기준임.

- 독일 특유의 독특한 도제시스템(Apprenticeship System)과 현장 실습이 강화된 직업교육체계(Dual System)가 기업에 필요한 기술·숙련직을 양성하고 일정기간의 직장 경험 이후에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제공
 - 2008년 기준으로 약 48.5만 기업이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는데 이 중 99.1%는 500인 이하 중소기업⁵⁾임. 이에 따라 직업 교육생의 82.3%(2009년)가 중소기업(Mittelstand)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있고 해당기업에의 취업률 또한 높은 편임

4)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ISCED 3~4에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ISCED 3에 해당, p.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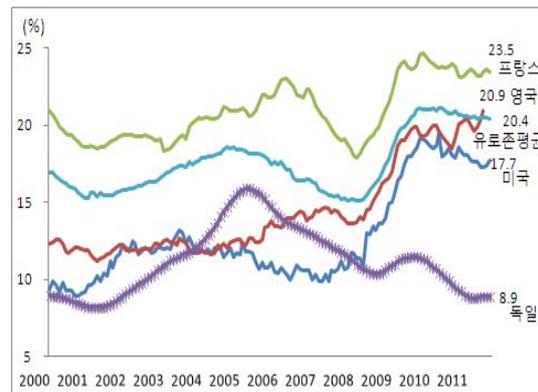
5) 독일 중소기업청, 독일은 고용인원 500인 이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구분됨.

- 한편, 청년층(15~29세) 취업자 중 대졸 이상(최종학력) 비중은 14.4%로 유로존 평균 23.8%, 프랑스 36.6%에 비해 크게 낮으나, 30세 이상의 경우 30.9%가 대학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 직무와 연관된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됨
- 이러한 잘 발달된 직업교육체계는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독일의 청년층(15~29세)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한 이후에 고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자 중 고졸 이하 비중이 59.5%에 달함
-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1년 8월 기준 8.9%로 유로존평균 20.4%, 프랑스 23.5%, 미국의 17.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주요국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비중>
(%)

	중졸이하 (ISCED0-2)	고졸이하 (ISCED 3-4)	대졸이상 (ISCED 5-6)
독일	25.9	59.5	14.4
프랑스	16.2	47.2	36.6
영국	14.7	52.2	32.0
유로존 평균	25.4	50.7	23.8
한국	2.7	42.3	55.0

<주요국의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EUstats,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EUstats.

주: 2010년, 15~29세이며 최종학력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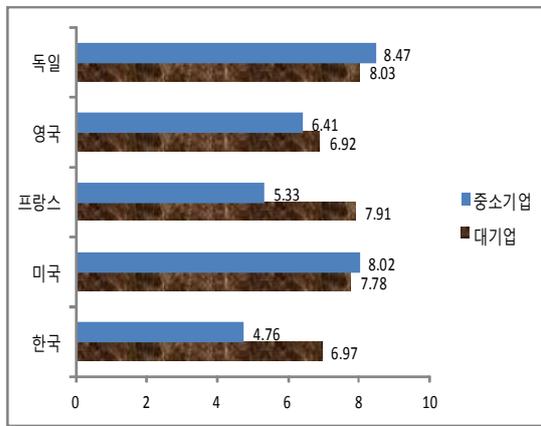
주: 25세 이하, 월 기준이며 계절조정임.

○ (세계화된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

- 독일 중소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8%, 고용의 78.6%로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IMD(2011)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세계 2위 수준이며 대기업보다 효율성이 더 높다고 평가됨
- EU의 중소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고용성장률과 부가가치 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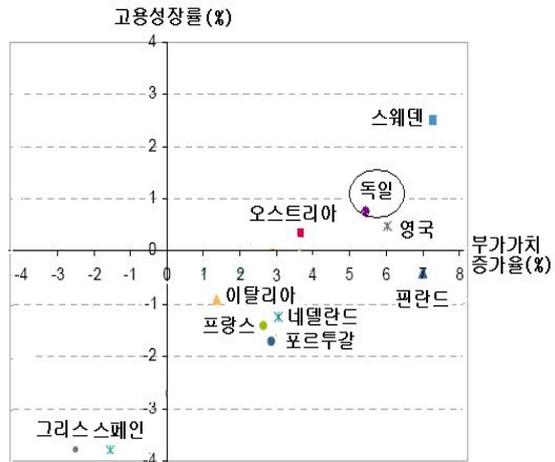
- 특히 경쟁력이 높은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독일의 1,500개 기업(1,500개 중 1,350개가 중소기업으로 분류)⁶⁾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허든 챔피언으로 구분되며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음
 - 최근 독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들은 2011년 경영상황을 지난 2007년의 호황 때보다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몇 달 동안 약 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⁷⁾

<대 - 중소기업 효율성 평가 지수>



자료: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2011).
 주: 국제기준에 의거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1~10 으로 측정.

<유럽 주요국의 중소기업 성장률>



자료: EU, EU 중소기업 보고서(2011.10 월).
 주: 2010년 추정치임.

3) 시장적 요인

○ (높은 노동생산성)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수출 거점화⁸⁾와 유로화 도입 이후 실질실효환율의 절하로 노동비용 대비 높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짐

- 독일의 임금상승률은 낮고,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높아져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을 낮추면서 주요국 대비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짐
 - 국가 간 단위노동비용을 비교해보면, 독일은 2005년 이전에는 주요국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단위노동비용이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져 독일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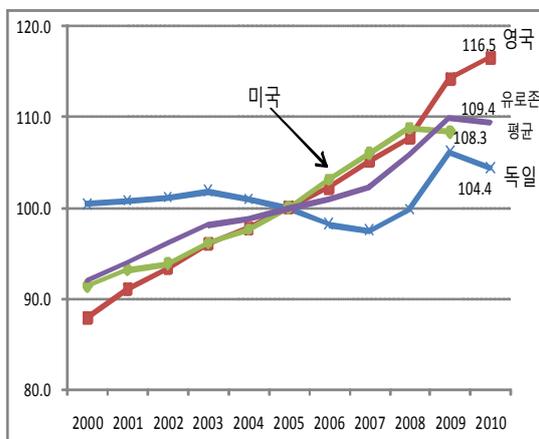
6) 베른 베노어(2010), "The power of uncommon common sense management principles- The secret recipe of German Mittelstand companies".

7) 2011년 여름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약 4분의 1(23%)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계획 중이며, 약 68%의 기업들은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며 10% 정도만이 일자리를 축소할 계획¹⁾이라고 응답함

8) 독일 수출전문가 위원회(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에 따르면 2005년 구동독 지역의 해외 수출 주문량은 2000년 대비 80% 급증한 것(2005년 이후로는 구 동서독 구분 자료를 발표하지 않음)으로 조사됨.

- 한편,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독일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1.2%로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됨
- 이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이 실질적인 저임금 지역으로 수출 거점 역할을 확대하면서 서독 지역의 임금 상승까지 억제시키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됨
 -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5년 1월 19.4%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2011년 8월 11.2%를 기록하였고 구 서독지역도 동기간 10%에서 5.9%로 하락
 - 기업규모/지역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2009년 동독지역의 임금은 서독의 74% 수준으로 여전히 낮음. 특히 5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은 유로존 여타 국가 대비 큰 폭으로 절하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재차 투자와 고용을 호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유로화 도입 초기, 독일의 실질실효환율은 여타 유로존 국가대비 높았으나 이후 낮은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면서 2005년부터는 PIGS 국가들보다 절하된 실질실효환율을 유지
 -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로 독일의 경상수지는 2004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GDP대비 5%에 달하는 규모이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상수지 흑자국임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 비교>



자료: OECD 통계.

<독일 기업규모/지역별 월평균 임금 >
(단위:유로, %)

기업 규모(명)	지역별 월평균 임금		B/A
	서독(A)	동독(B)	
전체	3,456	2,654	74
1~49	2,881	2,186	72
50-99	3,082	2,295	71
100-249	3,322	2,462	71
250-499	3,707	2,878	75
500-999	3,954	3,235	80
1000~	4,469	3,672	81

자료: 독일 통계청, 2010년 통계연감.

주: 2009년 기준임.

○ (근로조건이 탄력성이 높은 서비스업의 고용이 활성화)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고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시간제 및 여성 취업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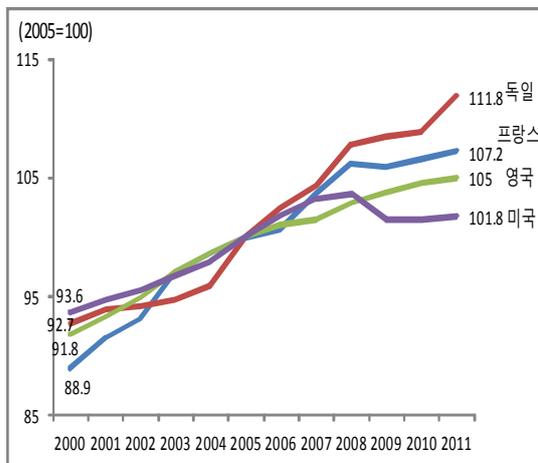
- 내수 중심의 서비스업 고용이 활발해지고 비중이 확대된 것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OECD의 서비스업 고용지수(2005=100)를 보면, 독일은 2011년 2/4분기 111.8로 프랑스 107.2, 영국 105에 비해 높아 서비스업의 고용이 활성화
- EU집행위에 따르면 독일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2000년 67%에서 2008년 72%로 확대되었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도 1970년대 48.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비중을 확대하여 2000년대에는 평균 67.8%로 늘어남

- 특히,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는 시간제 취업자 증가와 여성 고용률을 개선시켜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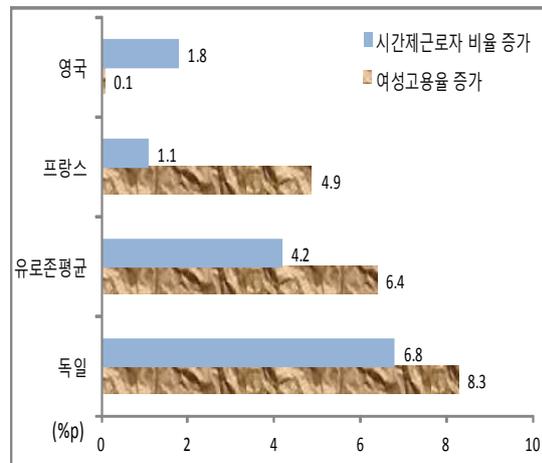
- 독일의 전체 고용 중 시간제 취업자(Part-time)의 비중이 하르츠 개혁 이전 19% 수준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0년 25.5%를 기록하였는데 2000년 대비 독일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6.8%p 높아짐
- 한편, 여성고용률(15~64세)도 2000년 57.8%에서 2010년 66.1%로 상승하여 8.3%p 높아졌는데 이는 영국 0.1%p, 프랑스 4.9%p, 유로존 평균 6.4%p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주요국의 서비스업 고용지수 추이>



자료: OECD.
주: 2011년은 2/4분기 기준임.

<주요국의 시간제 및 여성고용률 증가>



자료: Eurostats.
주: 2000년대비 2010년 증가폭임.

3. 국내 고용시장에의 시사점

○ 국내 고용시장의 체감⁹⁾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형 다변화와 시간/유연제 근무 확대 등을 통한 고용시장 유연성 제고, 실업계 고교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로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 완화,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첫째, 독일 하르츠 개혁과 같이 정부기관의 일자리 중개기능 확대, 고용 유형 다변화를 통해 국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

·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과잉 고용복지를 축소한 것 이외에도 고용중개청 설립 등을 통해 구인·구직자 간의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Minijob, Midijob 등 고용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독일의 고용지원센터(PES; Public employment services)는 2011년 4월 기준 직원 1인당 청년실업자는 86명(1:86), 그 외는 158명(1:158)에게 심층적인 구직 컨설팅을 제공

- 둘째, 시간/유연제 근무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와 장기 실업자의 고용시장 진입을 확대시켜 나가야 함

· 민간부문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시간/유연제 근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망을 확충

· 한국은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의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 많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 셋째, 실업계 고교 진학을 제고, 기업 연계 직업교육 강화로 고학력 현상을 완화하고 고학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야 함

·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마이스터 고교 등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구직·구인 간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해야 함

·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량 중소기업과의 기업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 실습 기회를 넓혀 기업 맞춤형, 기술 중심적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함

9) <별첨 1> p.12~13 참조.

- 아울러, 사회 차원에서도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신설과 실습 직업교육 강화로 직업 스펙트럼을 넓혀나가야 함
- **넷째,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
 -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중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부문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켜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완화시켜 나가야 함
- **다섯째,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서비스 업종의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 규모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해 나가야 함
 - 특히, 서비스 산업은 근로조건의 탄력성이 높아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여타 산업 대비 높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접 컨설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함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chjss@hri.co.kr, 2072~6217)

<별첨 1> 국내 고용시장의 체감도 악화 원인

- 국내 고용시장은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신규 일자리 증가 등 고용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정체된 고용률,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고용 지표와 체감 간 괴리가 커지고 있음
- 국내 고용시장은 지표와 체감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음
 - 2006년 이후 국내 실업률은 3%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7~8%대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며 청년층의 신규 취업자수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전체 고용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도 지속되면서 체감 고용 경기는 낮음
- 학력과 일자리 간 미스매칭으로 청년 취업자 중 100만명이 과잉 학력 상태
 - 2010년 기준 15~29세 청년 취업자 중 대학 학력 이상 졸업자는 2백 15만명에 달하나 이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1백 15만개에 불과해 100만 명 이상이 실제 학력 수준보다 낮은 학력 수준의 일자리에 고용되어 학력 과잉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
 - 한국의 대학졸업자의 고용율은 76.1%로 독일 86.4%, 일본 79.7%, 미국 80.8%에 비해 낮아 교육과 고용의 긍정적 관계¹⁰⁾도 저조한 편임

<국내 고용 현황>

(%, 전년대비)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업률	3.3	3.0	3.0	3.4	3.4
청년 실업률	7.9	7.2	7.2	8.1	8.0
고용률	59.7	59.8	59.5	58.6	58.7
비경제 활동인구 증감(천명)	227	171	297	447	143
청년 신규취업자 증감(천명)	-180	-68	-119	-127	-43

<청년취업자의 학력별 미스매칭¹¹⁾>

(단위:천명)

	필요학력별 일자리 수 (A)	필요학력별 보유자 수 (B)	평가 (B-A)
ISCED 5-6	1,152	2,154	1,002 (공급초과)
ISCED 3-4	2,447	1,655	-792 (공급부족)
ISCED 0~2	315	105	-210 (공급부족)

자료: 통계청.

주: 청년 취업자는 15~29세임.

자료: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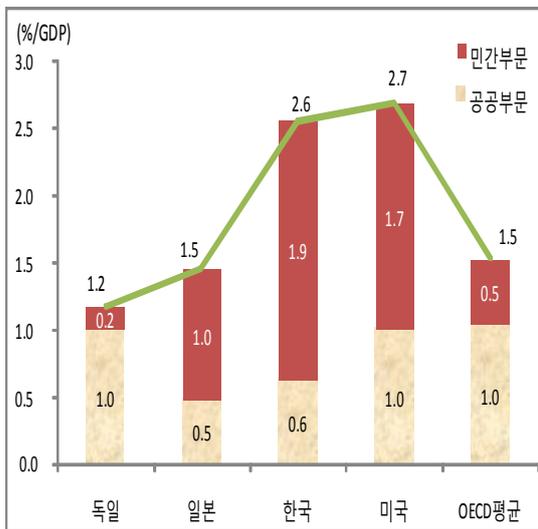
주 1) 15~29세 취업자 기준임.

2) ISCED0~2는 중졸 이하,
ISCED3~4는 고졸 이하,
ISCED5~6 대졸 이상.

10) 25~64세 이상의 대학졸업자이며 2009년 기준임, Education at a glance,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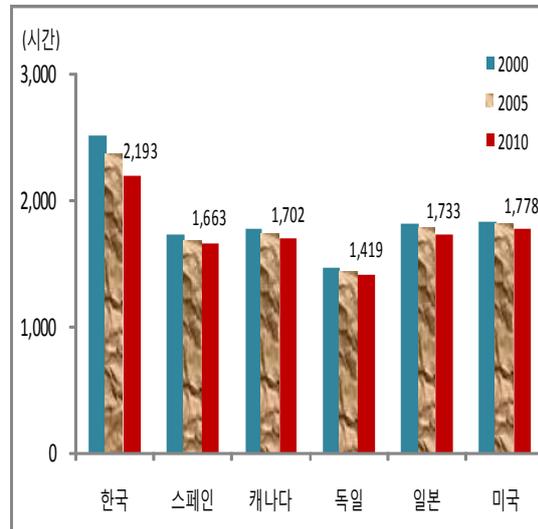
- 이외에도 고학력 선호로 인해 대학 교육(Tertiary Education)에 OECD 국가 평균 대비 GDP의 1.1%인 약 11조 3천억원의 사회비용을 초과 부담
 - 2008년 기준 한국의 대학교육 지출 규모는 GDP대비 2.6%에 달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에 비해 1.1%p 높음. OECD 평균을 초과한 GDP의 1.1%는 1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임
 - 한국은 대학교육에 있어 공공 비용부담률이 OECD 평균인 GDP 대비 1.0%에 비해 절반 수준인 0.6%에 불과한 반면, 민간 부담률은 공공 부문의 3배에 달함
 - 특히, 한국의 민간 부문의 비용 부담률이 독일에 비해서는 10배 정도로 높아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1인당 연간 평균 근무시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도 낮음
 -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2010년 기준 2,193시간으로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1,663시간), 캐나다(1,702시간) 보다 400시간 이상 많고, 독일에 비해서는 700시간 이상 노동시간 긴 것으로 조사됨
 - 한국의 노동시간과 실업률 간에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¹²⁾가 나타나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의 단축은 고용 증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GDP대비 부문별 대학교육 지출 비교>



자료: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2008년 기준임.

<주요국의 연간 평균노동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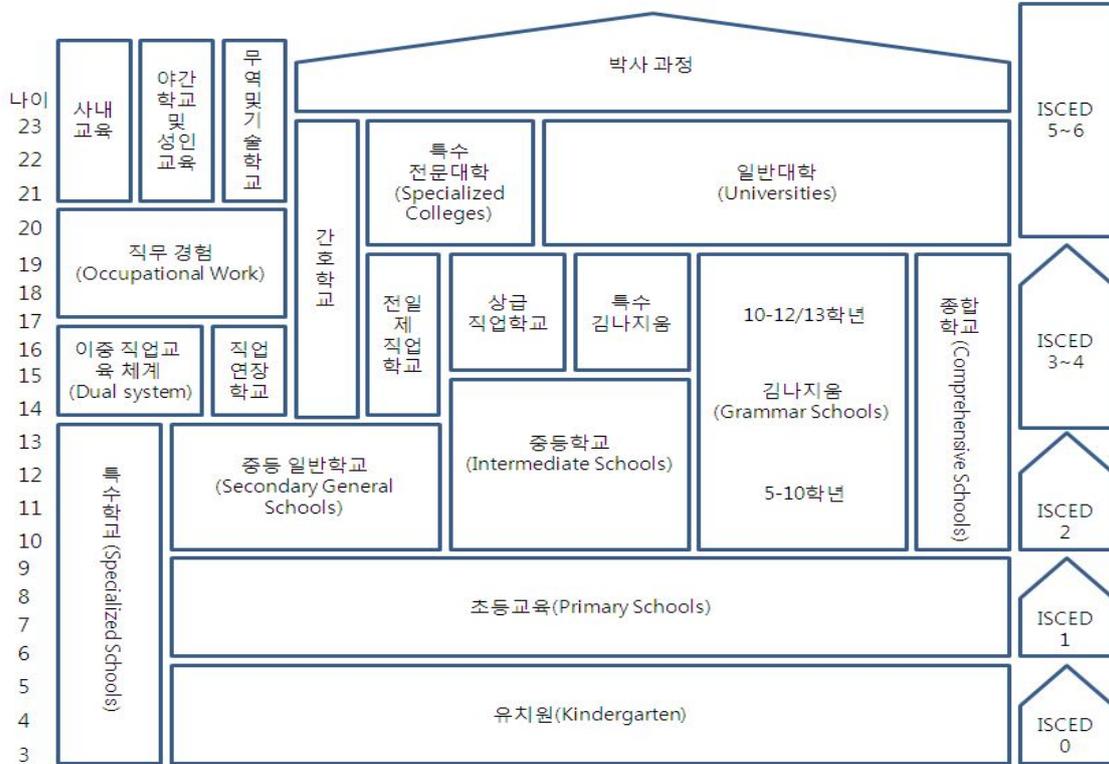
자료: OECD 통계.
주: 2010년 값만 표기됨.

11) 취업자의 교육정도는 직업별 분류표에 의거해 관리자 및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ISCED 5~6단계, 사무·서비스·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ISCED 3~4단계, 단순노무 종사자는 ISCED 0~2단계로 구분하였음.

12) 2000~2010년까지 한국의 실업률과 1인당 연간 평균근로시간 간에는 0.520의 높은 상관계수가 측정되었음.

<별첨 2. 독일의 교육과정 체계와 한국과의 비교>

1) 독일 교육과정 체계



2) 한국 교육체계와의 비교

독일의 교육과정	ISCED	한국의 교육과정
일반대학, 특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ISCED 5~6	일반대학, 특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
후기 고등학교과정(1~2년) -상급 직업 및 기술학교	ISCED 4	
고등학교 과정(2~3년) -김나지움(11~13학년) -이중 직업교육체계 등	ISCED 3	고등학교 과정(3년)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등
중학교 과정(6년) -김나지움(5~10학년) -실업계 학교	ISCED 2	중학교 과정(3년)
초등 교육과정(4년)	ISCED 1	초등 교육과정(6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0월 14일	10월 2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25	2.20	-0.05%p
	엔/달러	92.93	88.43	81.19	76.90	76.83	-0.07¥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740	1.3765	0.0025\$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644	11,542	-102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748	8,682	-6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1	3.44	0.03%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56.0	1,145.0	-1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35.4	1,805.1	-30.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10월 14일	10월 2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7.00	85.69	-1.31\$
	Dubai	78.06	73.14	88.80	105.25	105.38	0.13\$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17.18	307.68	-9.5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